

## 암호화폐산업 안정화 및 건전화에 위한 방안

한국블록체인협회 블록체인캠퍼스 학장 최화인(20181121)

“가상계좌발급은 자금세탁방지 등 금융범죄 방지를 위한 선제적 조건”

“건전한 거래소만 영업이 어려워지는 ‘규제의 역설’ 발생”

“은행 및 거래소 모두 의심거래·고액거래를 KoFIU에 신고할 수 있어야”

“암호화폐산업의 가변성 및 규제 공백 해결 위해 단계적 기준 필요”

### 1. 실명 가상계좌 발급은 금융거래 안정화의 전제조건

○ 실명 가상계좌 발급은 금융거래 안정화를 위한 방법이지 안정화의 결과물이 아니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음

- 금융위원회는 암호화폐 거래소에 “금융범죄 및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적절한 장치를 마련해야 신규가상계좌 발급을 허용하겠다”고 요구하고 있지만, ‘실명가상계좌’ 부여는 금융범죄 차단 및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필수불가결한 선제적 요건에 해당

○ 예를 들어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계좌(A)에서 거래소 집금계좌(B)로 입·출금한 이력이 있을 경우, 관련계좌(A, B)의 거래 중단으로 집금계좌(B)를 이용하던 해당 거래소 이용자 전체가 입·출금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

- 또한 해당거래내역을 파악하기 위해서 집금계좌(B)의 개별 거래를 대조해야 하는데, 집금계좌의 경우 이용자 모두의 입출금 내역을 대조해야 해당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 시간이 소요돼 금융범죄의 신속한 추적이 어려움

○ 만약 이용자 1인마다 개별 실명가상계좌가 발급되었다면 문제 거래와 관련된 해당계좌만 거래가 중단돼 거래소 전체 이용자들의 입·출금 서비스가 중단되는 불편 없이 관련 입출금 내역을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어 거래추적이 용이함

○ 가상계좌 발급은 안전한 금융거래 및 신속한 금융범죄 추적을 위한 요건으로, 금융범죄 차단 및 자금세탁방지를 위해서는 거래소에 가상계좌발급을 허용해주는 것이 오히려 타당함

## 2. 암호화폐거래소의 AML은 모니터링·이상거래 신고·기록보관이 최선

- 지난 '18년 10월 14일부터 19일까지 개최되었던 FATF(국제자금세탁 방지기구) 총회에서도 암호화폐가 범죄와 테러에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는 지속적인 감시 및 의심거래 신고, 기록보관이라는 기존의 원론적인 기준을 유지하였으며, 거래소에 적용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기준들은 '19년 6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라고 발표
- 암호화폐 거래의 특성상 ①국가간 송금이 쉽고 간편할 뿐만 아니라 ②개별 거래소에서 송금되는 암호화폐의 수취인과 관련된 실명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워 ③은행 등의 금융기관보다 AML의 구체적인 기준마련이 어려움
- 범죄와 연루된 거래가 있을 경우 추적을 위해 관련 기록의 장기보관 필요
- 금융정보분석원 고시 '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' 제47조(송금 금융기관의 의무)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보관·제공해야 함
- 이때 은행과 같은 금융회사에서 수집하는 ▶수취금융기관명, ▶수취인의 성명, ▶은행계좌번호를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대신 “참조 가능한 단일번호” 즉 수취인의 암호화폐 지갑주소 및 관련데이터 제공으로 대체해야 함
- 의심거래 신고 등에 관한 은행의 업무부담을 줄여주고 금융범죄 추적의 신속성을 부여하기 위해 거래소가 직접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

## 3. 자율규제 심사통과 거래소만 영업이 어려워지는 '규제의 역설' 발생

- 지난해 9월 정부합동 TF가 자율규제방안 마련을 권고함에 따라, 국내 주요 암호화폐거래소는 '한국블록체인협회'를 발족하여 28개의 일반 심사기준 및 8개분야 보안심사 기준이 담긴 자율규제 심사를 시행하여 12개 거래소가 심사에 통과하였음('18.7.11)
- 그러나 3달에 걸친 자율규제 심사를 통과한 거래소에도 신규가상계

좌 발급도 이뤄지지 않고, 해외 투자금 유치 및 해외 법인 신설 등에 필요한 국내외 자금이체 등의 금융거래에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 거래플랫폼으로서의 국제적 경쟁력 상실 우려

- 이에 비해 심사의 영역 밖에서 자금운영의 투명성과 상장절차의 적절성을 검증받지 않은 신생 거래소들은 규제 영역 밖에서 집금계좌(일명 ‘벌집계좌’)를 이용해 성업중
- 퓨어빗 등의 사기성 거래소를 비롯해 채굴형 거래소 등의 활성화로 금융사고 및 피해 가능성 확대
- 정부의 지침과 규제를 따르고자 하는 건전한 거래소일수록 영업이 어려워져 “악화가 양화를 구축(驅逐)”하는 ‘규제의 역설’ 발생

#### 4. 가변성이 큰 암호화폐산업에 적합한 규제 방식 필요

- 암호화폐의 발행시장(ICO) 및 유통시장(거래소) 안정화를 위해서는 ① 법적 정의와 범위를 한정짓고 법리적 근거를 제공해주는 입법, ② 개별 주체의 역할과 기능을 규정해주는 금융위원회 가이드라인, ③ 급변하는 산업동향에 맞춰 기준의 추가 및 적용이 용이한 자율규제 영역으로 구분하여, 산업의 가변성에 따라 입법/가이드라인/자율규제의 3단계 기준 적용 필요
- 이를 통해 규제의 불확실성 및 정책공백을 극복하면서도, 급변하는 시장동향에 따라 시의적절하게 기준 제시 가능
- 현존하는 시장을 무시하거나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규제의 범주 안에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함
- 향후 다양한 금융상품과 결합해 금융시장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큰 만큼 산업변화를 주시하고 관리방향을 찾아주는 것이 급선무